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8.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JP모건 공익신고자 CFTC로부터 포상금 3천만 달러 받아](#) 1
- [루마니아인 수 만 명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며 부패 항의시위 참여](#) ... 3
- [FIFA 윤리강령에서 부패 관련 언급 모두 삭제](#) 5
- [아미존 부패 문제 발생? 비밀 데이터 유출 대가로 현금 받은 임직원 조사 중](#)... 7
- [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 외국 기업 겨냥](#)..... 9
-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기소](#) 12
- [미국, 브라질 내 부정부패 조사 결과 페트로브라스에 8억5천3백2십만 달러 상당의 벌금 부과](#) 13

II 국제회의 동향

- [제27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16
-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 17
-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19

III 옴부즈만 소식

- [뉴질랜드 옴부즈만실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법원 구치소 모니터링 책임 맡아](#)... 20
- [나이지리아: 신임 옴부즈만 임명](#) 22
- [영국: 노스웨일스 자치정부 웨일스어 오기 교정 약속 불이행](#) 23
- [중국: 홍콩 옴부즈만 공공 수영장 레인 배정 관련 조사](#) 25
- [아르메니아: 인권위원장 보건부의 정신병원 분야 개선 조치 환영](#) ... 27
- [뉴질랜드: 옴부즈만 완기누이 교도소 재소자의 폭력과 위협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 촉구](#) 28
- [호주: 아동보호부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결과 발표](#) 30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JP모건 공익신고자 CFTC로부터 포상금 3천만 달러 받아 (American Banker, 2018.7.1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JP모건이 고객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 지난 목요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과 관련된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제이피 모건 체이스가 부유한 고객들에게 투자 추천을 하면서 이익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한 통보를 하지 못한데 대한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CFTC는 목요일 관련자 개개인이나 은행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포상금 지급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에드워드 시들 변호사는 제이피 모건이 자산관리 고객들에게 자사에 특별히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를 권유하면서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밝히지 않은 데 대하여 총 3억6천7백만 달러를 규제당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2015년 12월 합의안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 이 금액은 CFTC에 지급된 1억 달러(벌금 4천만 달러, 부당이득환수액 6천만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제이피 모건은 또한 2015년 12월 당시 허가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6천1백만 달러의 예비 공익신고 포상금 두 건을 포함하여 추가로 2억6천7백만 달러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 CFTC의 이번 포상금은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16년 발표된 1천만 달러 포상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성공으로 이끈 정보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약 5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던 20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공익신고 포상금이기도 하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은 ‘이러한 상당 규모의 포상금을 통하여 더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귀중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시장 참여자들이 원자재 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들 변호사는 목요일 오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자신의 고객이 CFTC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시들 변호사는 또한 동일한 고객을 대리하여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예비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 시들 변호사는 또한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투자사기에 상품 관련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CFTC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 증권거래위원회의 주디 번스 대변인은 제이피 모건의 다린 오두요이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는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에 의거하여 별도의 공익신고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은 공익신고자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에 따라 환수된 부당이익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양 위원회 모두 공익신고 포상금 수여자와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CFTC는 2017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공조 및 공익을 위하여 앞장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 보호조치 강화를 위하여 공익신고 포상금 프로그램을 개정했다.
- 제이피 모건 측은 자회사나 자사와 수수료를 나누는 제3자가 운영하는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정보를 자산관리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제이피 모건은 자산규모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며, 해당 정보 공개 생략은 의도되지 않은 것이었고 현재는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JPMorgan whistleblower gets record \$30M from CFTC (American Banker, Jul. 12, 2018)

루마니아인 수 만 명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며 부패 항의시위 참여 (NPR, 2018.8.13)

루마니아인 수 만 명은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처벌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정책을 반대하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사회민주당의 정권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 최근 사흘 연속으로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의 거리는 현 정부의 부패를 규탄하고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 시위 첫날인 금요일에는 수 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항의 시위 참여를 위하여 귀국한 재외 루마니아인들이 조직한 집회 참여자 수는 십만 명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 시위는 폭력사태로 마무리되었다. 루마니아 인사이더지는 금요일 밤 축구 홀리건으로 추정되는 일부 과격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루마니아에서는 정치적 시위에 축구 홀리건들이 자주 나타난다.) 진압을 위해 전투경찰이 최루탄과 연막탄을 발포하고 부카레스트 빅토리 광장에서 다수의 평화시위자를 포함한 군중에 물대포를 쏜 것으로 알려졌다.
- 루마니아 인사이더지는 경찰이 '유례없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다고 보도했으며 수 백 명의 시민이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 그러나 시위대는 포기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거리로 나왔다.
-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요일 부카레스트와 다른 도시에서 열린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 로이터는 또한 '15,000 명의 시민이 일요일 루마니아 수도에 위치한 정부청사 앞에 운집해 호루라기와 부부젤라를 불며 '부패는 죽음이다!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또한 루마니아 국기, 미국 국기, 나토기, 유럽연합기를 흔들며 '도둑, 도둑'이라고 외쳤다'고 보도했다.
-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루마니아 좌파 정권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부카레스트 집회를 지지하기 위하여 유럽 반대편에서 차를 몰고 오기도 한 재외 루마니아인들은 현재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권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16년 이래로 부패 척결 의지가 퇴보했다고 말한다.

- 약 3백만 명의 루마니아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그들 중 일부는 부패와 낮은 임금, 기회의 부족을 이유로 고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 시위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최근 집권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집권당에서 추진하는 변화들이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 집권 사회민주당의 리비우 드라그네아 대표는 올해 초 직권남용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진행되면서 아직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드라그네아는 그 이전에도 선거 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 NPR의 소라야 사라디 넬슨 기자는 2014년 ‘루마니아는 수년 간 유럽에서 가장 경제수준이 낮고 부패한 국가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같은 해 반부패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선후보 클라우스 요하니스가 당선되었고 뇌물과 공금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다.
- 그러나 요하니스 대통령의 자유당은 부패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연립정부를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우세한 입법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 재임 중 부패, 사기,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사회민주당 출신 총리가 지난 2015년 미흡한 안전 관리와 부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트클럽 화재 사망 사건 이후로 사임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회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부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해 루마니아 정부는 여러 유형의 부정 금품수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고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진 이후에야 계획을 철회했다.

※ 원문기사 : Tens Of Thousands Of Romanians Protest Corruption, Demand New Government (NPR, Aug. 13, 2018)

FIFA 윤리강령에서 부패 관련 언급 모두 삭제 (The Washington Post, 2018.8.14)

FIFA의 새로운 윤리강령은 부패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췄고 공식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 국제축구연맹 FIFA는 수년간의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연맹 윤리강령에서 ‘부패’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 FIFA 임원들은 지난 수년간 뇌물수취, 공금횡령, 승부조작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다. 가장 큰 의혹이 일었던 제프 블래터 전 회장과 잭 워너 전 부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연맹에서 제명되었다. 워너는 여러 범죄 혐의로 연맹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부패와 부실운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FIFA 윤리위원회는 2015년 블래터를 면직했다. 워너는 2011년 연맹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FIFA는 워너가 연맹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 그런 윤리위원회가 최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 2012년 채택된 이전의 윤리강령은 ‘뇌물 및 부패’와 관련하여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뇌물 및 부패에 대한 기소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 그러나 2018년 개정된 윤리강령은 ‘내기, 도박,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 및 ‘뇌물, 자금유용 및 승부 조작’을 특정지어 명시하고 있다.
- 2015년 워너를 포함한 십 여 명 이상의 임원들이 송금사기, 공갈,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사법부에 기소된 이후 FIFA는 강력한 부정부패 단속을 약속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 내 부정부패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FIFA는 지난 5월 2016년 월드컵에서 캐나다에게 패배하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대표팀에 제안한 혐의로 전 엘살바도르 대표팀 코치를 연맹에서 영구 제명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대가로 특정 회사에 독점 취재권을 부여한 혐의에 대하여 과테말라 축구연맹의 전 사무총장을 영구 제명하기도 했다.

-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윤리강령은 지금까지의 부정부패 단속 성과를 퇴보시키는 듯 보인다. 새로운 윤리강령에 나타난 변화가 단순히 말만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범죄에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앞서 말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 또한 새로운 윤리강령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최대 5년까지의 자격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 새로운 윤리강령 제 22.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본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자는 FIFA 경기와 관련하여 FIFA 또는 본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기타 어떠한 자에 대해서이든 어떠한 공식적인 명예훼손성 발언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What corruption? FIFA deletes any mention from new code of ethics
(The Washington Post, Aug. 14, 2018)

아마존 부패 문제 발생? 비밀 데이터 유출 대가로 현금 받은 임직원 조사 중 (Newsweek, 2018.9.17)

아마존은 일부 직원이 브로커에게 판매 데이터, 고객 이메일 주소, 부정적 리뷰 삭제 등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지난 월요일 아마존 대변인은 뉴스위크지에 일부 직원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회사의 비밀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입장 발표는 아마존 직원들이 판매 증대를 도모하거나 경쟁 판매자에 타격을 입히고 싶어 하는 제3의 판매자에게 중개인 혹은 ‘브로커’를 통하여 어떻게 비밀 데이터를 제공해 왔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세히 보도한 뒤에 나왔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개인들은 SNS와 채팅앱 등을 살살이 뒤져 아마존 직원을 찾아낸 뒤 현금을 대가로 문제의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혹한다. 관련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미국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중국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취재 결과 아마존 직원에게 접근하는 브로커들은 판매 데이터, 리뷰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 부정적인 리뷰 삭제, 활동 금지 계정 복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뉴스위크지에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대가를 받고 판매된 정보들의 가격은 80달러부터 2천달러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여기에는 고객이 물품을 찾기 위하여 입력했던 검색어 등의 ‘아마존 독점 판매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300달러를 지불하면 부정적인 댓글을 모두 지워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터 브로커들은 한 판매자에게 다섯 개 이상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을 때 이를 삭제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에 대하여 아마존 직원들과 브로커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 아마존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 임직원들은 영업행위 및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마존은 또한 ‘우리는 임직원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고용계약 종료 및 민사·형사상 처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아마존은 또한 ‘판매자의 시스템 악용에 대해서는 불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판매자 계정 삭제, 리뷰 삭제, 대금 지불 동결, 법적 조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공룡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최근 미국 내에서 애플에 뒤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한 두 번째 회사가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그러나 최근 몇 달 간 아마존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 직원 일부가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휴지통에 불일을 봤다고 보도했다.
- 그러한 보도 내용은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 일부가 화장실 시설 부족으로 병에 소변을 봤다는 올해 초 영국 비밀 조사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후 아마존은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의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 원문기사: Does amazon have a corruption problem? website investigates staff leaking secret data for cash (Newsweek, Sept. 17, 2018)

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 외국 기업 겨냥 (LEXOLOGY, 2018.9.17)
 태국은 뇌물제공자에 외국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18년 7월 반부패법을 개정하였다.

- 태국은 최근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늦게 국가 뇌물 방지법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이 모두 올 해 뇌물 방지법을 입법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기업의 법률 관련 리스크가 소폭 증가하게 되었다.
- 태국에서 2018년 7월 22일 부패 예방 및 억제에 대한 헌법 보완법 B.E. 2561 (2018) 이 발표되면서 오랜 반부패 기본법 B.E. 2542 (1999) ('OACC')이 폐지되고 새로운 반부패법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법은 뇌물수수죄를 저지할 수 있는 자의 정의에 외국 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태국에 법인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이제 적절한 내부 통제 방안을 보유하거나 혹은 관련 지침 준수를 위하여 기존의 부패 방지 정책을 다시 검토 해야만 한다.

배경

- 새로운 반부패법은 태국 정부가 반부패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2015년 OACC가 확대되어 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에 대한 뇌물 요구와 공여가 금지되었다 (새로운 반부패법 173장과 176장에 명문화). 2015년 법 개정에는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기업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기업의 형사 책임을 도입하고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영국의 뇌물법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태국 입법부가 기업 뇌물수수 근절을 위하여 영국 뇌물법을 차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새로운 반부패법의 주요 개정 부분

외국 기업

- 외국법인이 새로운 법의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외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태국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태국 공무원에게

공여한 뇌물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뇌물이 관련자로부터 공여되었고 (고용인, 합작회사, 대리인 포함)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 (문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절차가 존재했음을 회사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이러한 방어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무엇이 '적합한 내부 통제 방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다. 2017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는 '국가공무원, 외국 공무원, 국제 공공기관 대리인에 대한 뇌물 수수 예방을 위한 법인의 적절한 내부 통제 방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새로운 반부패법에도 적용되며 8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원칙 1 강력하고 가시적인 정책과 뇌물 근절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지원
 - ▶ 원칙 2 뇌물 문제에 대한 노출도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 평가
 - ▶ 원칙 3 고위험/취약 영역에 대한 세부 방안 강화
 - ▶ 원칙 4 사업 파트너에게 뇌물근절 방안 적용
 - ▶ 원칙 5 정확한 장부 및 회계 기록
 - ▶ 원칙 6 뇌물 근절 방안에 상응하는 인사관리 정책
 - ▶ 원칙 7 뇌물 수수 의혹 신고를 장려하는 의사소통 메커니즘
 - ▶ 원칙 8 뇌물 근절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
- 법인의 형사 책임 조항을 근거로 실제 기소가 이루어진 예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이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 기업 및 그 관련자들에게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게 될 것이다. 영국 뇌물법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인에 대한 기소 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경우 4년 이상)
- 기업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불법행위를 통하여 공여 받은 금액과 최소 같은 금액 혹은 최대 그 2배 금액으로 규정된 OACC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국적 기업

- 새로운 반부패법은 또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제적 지원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 증거수집과 소송 진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국제적 공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원문기사 : Thailand's new anti-corruption law targets foreign corporates (LEXOLOGY, Sept. 17, 2018)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기소 (RUETERS, 2018.9.18)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공사업 계약 사업 수주를 대가로 건설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아르헨티나 연방 판사가 발표한 기소문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정부에서 공공사업계약 수주를 댓가로 건설회사에서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아르헨티나 검찰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기간동안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정재계가 연루된 광범위한 부정부패 네트워크를 이끌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은 지난 8월 아르헨티나의 한 신문에서 페르난데스 행정부 당시 기획부 장관의 운전기사가 보관한 노트 필기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문제의 노트에는 정부기관들 및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그 남편이자 역시 전 대통령이었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주거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돈 가방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하여 즉각 답을 하지 않았다. 현 상원의원인 페르난데스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불기소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 페르난데스의 부패 스캔들 조사를 이끌고 있는 클라우디오 보나디오 연방 판사는 페르난데스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상원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기소문은 ‘이러한 불법 자금 공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적어도 어떤 기획부 소속 관련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연루되었는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이번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수십 명의 건설 부문 전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이번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경제 악화와 공공사업 축소, 60%에 달하는 금리로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건설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 페르난데스는 이미 다른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엔 다시 한 번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원문기사 : Former Argentina president indicted on corruption charges (REUTERS, Sept. 18, 2018)

미국, 브라질 내 부정부패 조사 결과 페트로브라스에 8억5천3백2십만 달러 상당의 벌금 부과 (Wall Street Journal, 2018.9.27)

미국 법무부는 8천5백3십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 지급, 3년간의 준법 보고서 제출 및 법률 위반 사실 인정을 한 페트로브라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 브라질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대하여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 당국의 조사를 종결하는 댓가로 8억5천3백2십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페트롤레오 브라실레이로 SA로 명칭을 변경한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목요일 기업 투명성 및 준법 향상을 위한 브라질 공공기금에 6억8천2백6십만 달러를 지급하고 추가로 1억7천6십만 달러를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정확히 절반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페트로브라스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브라질 고위 정치인과 페트로브라스 측 임원진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하여 건설회사 카르텔을 조사한 결과를 브라질 검찰이 2014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 ‘세차 작전’이라고 알려진 해당 조사는 그 이후 계속해서 페트로브라스와 브라질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회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주가가 폭락했다. 또한 브라질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와 고위경영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스캔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페트로브라스 하류사업부의 전 본부장 파울로 로베르토 코스타와 전 국제운영사업부 본부장 네스토르 세르베로 등을 포함하여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고위임원 몇몇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페트로브라스의 전 CEO 알데미르 벤디네 역시 브라질 중앙은행 방코 두 브라질의 CEO로 재직 중 연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올해 초 유죄판결을 받았다.

- 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법적 과급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기는 하지만 브라질과 네덜란드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인 중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페트로브라스의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의 수익성을 회복시켰고 유가 상승에 힘입어 어마어마한 부채를 경감해나가고 있다.
- 상 파울로 일레븐 금융연구소의 라파엘 피게이레도 애널리스트는 ‘이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제 새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합의금 지급 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 목요일 오후장에서 페트로브라스 우선주의 주가가 4.3% 상승하여 21.05헤알(5.26달러)에 도달했다. 2016년 페트로브라스의 주가는 4.41 헤알까지 폭락했었고 이는 스캔들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오기 직전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 ‘세차 작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브라질의 다른 대기업들도 이에 휘말렸으며 브라질 검찰은 그 중 특히 오데브레히트 SA가 문제의 건설회사 카르텔의 두목 격이었다고 밝혔다.
- 오데브레히트는 2016년 미국과 브라질, 스위스에 26억 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중 930만 달러는 미국에 지급되었다. 오데브레히트의 전 CEO 마르셀로 오데브레히트는 부패 혐의에 대하여 선고받은 10년형 중 2년 반을 복역한 이후 지금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 목요일 합의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 검찰 측은 페트로브라스도 부분적으로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일부 임원진과 경영진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 미국 법무부는 8천5백3십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 지급과 3년간의 준법 보고서 제출, 문제의 행위가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확한 회계기록을 작성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가로 페트로브라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페트로브라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부패 스캔들에 대한 조사와 각 개인에 대한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령 중 하나인 브라질 해외부패행위방지법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를 포함하여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외국 정부 관료에 뇌물을 공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은 정확한 금융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검찰 측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는 자사의 이사회 임원들이 브라질 정치인과 정당에 불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의 돈 중에는 페트로브라스의 한 임원이 자사의 계약에 대한 의회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조건으로 공여한 뇌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 미 법무부 형사부장 브라이언 벤츠코우스키는 ‘지휘부와 이사회를 포함하여 페트로브라스의 최고위 임원들이 브라질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수억 달러 상당의 뇌물 공여를 도모했고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으로부터 뇌물 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 페트로브라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9억3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위원회는 올해 초 페트로브라스의 부정행위를 고소한 투자자들과 합의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8천5백만 달러 상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 합의금 총액의 5분의 1 상당이 미국에 지급되는 페트로브라스 합의 건은 미국 검찰이 외국 검찰과 공조하여 다국적 기업과 조사 진행 중 신속한 합의에 도달한 가장 최근 사례이다. 이는 또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건을 그저 ‘쌓아두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미국 검찰의 최근 정책기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기업과 기업 측 법률 대리인들은 기업 범죄 해결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환영하고 있다. 수년 간 지속되면서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수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건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 원문기사 : Petrobras to Pay \$853.2 Million to Settle Corruption Probes in U.S., Brazil (Wall Street Journal, Sept. 27, 2018)

2 국제회의 동향

1 제27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1. 회의 개요

- 장소/일정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 '18.8.6(월)~7(화)
- 참석 : APEC 회원국 대표(21개국), OECD, TI 등 국제기구 70여명
 ※ 위원회 참석자 : 신고심사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의제
 -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 경과 및 반부패 활동 사항 보고
 - ACT 이니셔티브 및 국제포럼·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공유

2. 주요 논의내용

-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 13개 회원국(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뉴질랜드, 미국,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이 발표
 ※ 위원회는 한국 대표로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 마련 노력과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 보완 노력 소개
- 자원산업분야에서의 부패예방 중요성 강조
 - 미국, 칠레 등이 자국의 자원산업 투명성 제고 노력을 소개하였고, 인터폴은 자원개발 범죄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사법공조를 요청
- 2018 APEC 반부패·투명성 분야 각료회의* 선언문 검토
 - *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외교부, 산자부)로, 11월 개최 예정
 - 회원국은 부패자산 몰수를 위한 사법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과, 법률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부패척결(combating)'이라는 표현을 '부패의 범죄화(criminalizing)'로 수정하기로 합의
 - 회의 미참석 국가들에게 수정본을 회람한 후, 선언문을 확정기로 함

2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9.3.(월) ~ 9.7.(금) /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기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09개 당사국 대표,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DP(유엔개발계획), GRECO(유럽반부패국가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400명

※ 우리측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주비엔나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2. 회의 주요 결과

<제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 유엔반부패협약 신규 비준국(차드·적도기니)에 대한 점검국 추천 및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피점검국인 세인트루시아에 대한 점검국 재추천이 실시된바, 차드의 점검국으로 콩고와 니우에가, 적도기니의 점검국으로 기니바사우와 차드가, 세인트루시아의 점검국으로 도미니카가 선정됨
- 2주기 이행점검 1~2차년도 점검대상 77개 당사국 중 58개국이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51회 개최되었으며, 11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등)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됨
-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국가들에서 협약 제2장 중 제7조(공공부문),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민간부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제13조(사회의 참여), 제5조(부패예방 정책 및 관행)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파악됨
- 이행점검 체계 운영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 기여금 지원 확대, 관련 협약 이행점검체계와의 시너지 제고 등 추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요청됨

<제9차 부패예방 실무회의>

- 제7차 UNCAC 당사국 총회(17.11월, 비엔나)시 채택된 “부패예방 조치 장려”에 관한 결의문(7/5)에 따라, 올해 부패예방 실무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를 주제로 각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미국 및 유럽의 다수 국가가 공직자의 재산과 함께 이해관계에 관한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74%는 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관리자를, 52%는 동료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를 징계함
- UNODC는 '18.4월 글로벌 사법부 청렴성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www.unodc.org/ji)를 출범시켰으며, E4J(Education for Justice : 온라인 사법교육 www.unodc.org/e4j)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7.8월 이후 대학생 대상 청렴·윤리 관련 강의 모듈 14개를 개발함
 -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반부패 목표(16.5 “부패와 뇌물의 상당한 감소”) 이행과 관련하여, UNDP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부패 및 뇌물 관련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 부패예방 실무그룹은 제7차 당사국총회 결의문(7/5)에 따라 2019년 실무회의에서 “반부패 전략의 개발·평가·효과”(UNCAC 제5조)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제안을 반영하여 “공무원 채용·승진·퇴직 제도”(제7조 1항), “공공조달”(제9조 1항), “민간부문”(제12조)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3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9. 27.(목) ~ 9. 28.(금) /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
- 주관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참석자 : 56개 당사국, 옵저버 국가 등 총 70개국(국제기구 포함 270명 참석)
 ※ 우리측: 권익위원장, 권익위 과장 및 담당 사무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2. 주요 내용

- 일반토론에서는 총 25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 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함
- IACA 재정 관련, 이사회 의장과 학장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당사국의 기여가 필요함을 호소함
- 이사선거 관련, 권익위 위원장이 '19년 11월부터 5년 임기의 집행이사회 임원으로 선출
- 또한, 총회는 ① IACA 활동강화에 관한 결의안(오스트리아 제안), ② IACA 도서관 강화에 관한 결의안(파키스탄 제안), ③ 일반사항에 관한 결의안(카자흐스탄 제안)을 승인

3. 대표단 활동

- 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최근 반부패 활동과 성과, IACA와의 협력 활동, '20년 개최 예정인 IACC 회의 참석 요청
- 이사 선거 관련, 우리 위원회 지지를 표명한 국가 대표단(5개) 및 중국 대사(사전 조정), 말레이시아 및 이라크(양보)에 감사 표현
- 국제기구 및 MOU체결·정책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협력 유지 의사를 밝힘

3 옴부즈만 소식

□ 뉴질랜드: 옴부즈만실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법원 구치소 모니터링 책임 맡아

<뉴질랜드 옴부즈만실은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아 약 180개 노인요양보호시설과 60개 구치소 시설을 관리 감독 및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New Zealand ‘Ombudsman’s Office to take role in monitoring private aged care facilities / court cells’ (IOI 홈페이지>News, 7.11.2018)

- 옴부즈만실이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과 법원 구치소 수감자 처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곧 맡게 될 예정이다.
-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자로 옴부즈만실에 부여된 새로운 책무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UN 선택의정서(OPCAT)를 통하여 부여된 현재의 의무와 함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피터 보시에 옴부즈만 위원장은 ‘이번에 부여된 새로운 책임을 통하여 옴부즈만의 업무영역과 권한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면서 옴부즈만은 노인인 경우가 많은 취약계층 치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민간 요양보호시설을 관리감독 및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돌봄이 유지되고 개선되는 나라라는 뉴질랜드의 명예를 지켜야만 한다’.
- 보시에 옴부즈만은 민간 요양보호시설들이 그러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옴부즈만실의 관리감독을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업계 관련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상당히 큰 변화임을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독립 조사 계획이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하여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 보시에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실에서 교도소, 보건 및 장애인 수용시설, 이민국 구치소, 아동 돌봄 및 보호 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포함한 110개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 치매환자 요양시설은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에 공공 및 민간부문 시설 모두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번 조치로 전국 모든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 기준이 제공될 것이다’.
- ‘현재 상태로서 우리는 대략 180개의 민간운영 치매환자 수용시설을 감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독립 조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 수가 17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옴부즈만의 또 다른 새로운 업무 분야에는 법원 구치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사법체계 내 60개 이상의 구치소 시설이 옴부즈만실 OPCAT 감독관들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 ‘옴부즈만실은 필요인원 충원을 포함하여 우리의 새로운 업무분야 관련 계획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계획이 완료되려면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의회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 나이지리아: 신임 옴부즈만 임명

<나이지리아 옴부즈만에 변호사 및 국회의원 출신인 이그바우아 의원이 임명되었다.>

※ 출처: NIGERIA ‘Appointment of new Chief Commissioner (Ombudsman)’ (ICI 홈페이지>News, 7.13.2018)

- 신임 칠레 이그바우아 나이지리아 옴부즈만은 변호사 출신의 기술 행정관으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헌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런던·웨일스 인사관리자 학회 (FCIPA)의 회원이기도 하다.
- 이그바우아 의원은 나이지리아 및 외국 다수 기관에서 수학했으며 여기에는 우요앤조스 대학교, 베누에 주립대학교 및 영국, 미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의 다수 학교가 포함된다.
- 이그바우아 신임 옴부즈만은 국가 공공서비스 규제국장, 법무부 재무 행정국장, 재무경제기획부 사무차장 (변호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해당 직무에 진출) 등을 역임하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 이그바우아 옴부즈만은 현재 국회의원직에서는 사임한 상태이다. 이그바우아 옴부즈만 위원장은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007년 ~ 2011년 임기 중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 이그바우아 신임 옴부즈만은 2011년~2015년 아민 와지리 탐부왈 국회의장의 법무·입법 부문 차석보좌관직을 수행하며 국회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임명 전까지 야쿠부 도가라 국회의장의 법무·입법 부문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 칠레 이그바우아 신임 나이지리아 옴부즈만은 향후 3년간 나이지리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영국: 노스웨일스 자치정부 웨일스어 오기 교정 약속 불이행

<웨일스 옴부즈만은 민원인과의 약속 불이행을 한 시청에게 민원인에게 사과문 발송 및 100파운드 배상금 지급, 연간 납세 고지서 관련 공식 절차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하였다.>

※ 출처: UK 'North Wales Council breaks Welsh language promise' (IOI 홈페이지>News, 7.17.2018)

- 2017년 D씨(가명)는 렉섬 자치시 납세 고지서의 웨일스어 버전에 3년 연속으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웨일스 공공 서비스 옴부즈만에 신고했다. D씨는 2014년 처음으로 문제의 오류를 발견한 이래 해마다 자치구청에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 렉섬 자치시는 옴부즈만에 2018/2019 회계연도 납세 고지서의 오류를 수정할 것을 약속했지만 D씨는 문제의 오류를 올해 납세 고지서에도 또 발견하게 되었다.
- 옴부즈만은 자치시청이 옴부즈만과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특별 보고서[ii]를 발행하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 2014년 현 닉 베넷 옴부즈만이 취임한 이후 이러한 특별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 웨일스어 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자치시 납세 고지서에 사용되는 웨일스어 기준 준수 미이행에 대하여 이미 렉섬 자치시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웨일스어 위원회 위원장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웨일스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옴부즈만은 행정실책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웨일스 공공 서비스 옴부즈만 닉 베넷은 특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렉섬 자치시청이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고 약속했던 필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웨일스 언어 및 시민에 대한 렉섬 자치시청의 존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렉섬 자치시청은 D씨가 제기한 민원이 사소한 일이라고 느끼게

했으며 렉섬 자치시청이 옴부즈만과 한 약속이 단순히 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 ‘옴부즈만 취임 후 웨일스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보고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자치시청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치시청의 기준 준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 렉섬 자치시청은 현재 옴부즈만의 많은 추가 권고안에 동의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D씨에게 사과문 발송, D씨에게 야기한 부당함에 대하여 100파운드의 배상금 지급, 연간 납세 고지서 관련 공식 절차 명문화, 관련 자료의 외부 번역사 제공 등이 포함된다.

□ 중국: 홍콩 옴부즈만 공공 수영장 레인 배정 관련 조사

<홍콩 옴부즈만은 공공 수영장의 레인 배정 체계의 효율성과 감독당국의 관리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 출처: CHINA ‘Ombudsman Hong Kong to investigate allocation of swimming lanes in public swimming pools’ (IOI 홈페이지>News, 7.17.2018)

- 홍콩의 코니 라우 옴부즈만은 오늘 (7월 17일) 공공 수영장 레인 배정 체계의 효율성과 레저·문화서비스부가 감독 책임 당국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저·문화서비스부의 체계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체육 발전 및 훈련 장려를 위하여 레저·문화서비스부는 6개의 체육 연맹에 훈련과 시험 목적으로 공공 수영장의 일부 레인을 특정 시간 동안 배정한다. 해당 체육연맹들이 레인을 우선 배정받은 이후 이를 다시 소속 팀에 배정한다.
- 일부 체육연맹의 수영장 레인 배정 체계가 불공정하며 그 결과 규모가 큰 팀들이 작은 팀에 비하여 불공평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레인 이용권한의 양도와 같은 부정행위 및 이용약관 위반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다.
- 옴부즈만실의 예비 조사 결과 2005년 이후 레저·문화서비스부가 운영해온 중앙 수영장 레인 배정 시스템 하에서 레저·문화서비스부는 앞서 언급한 체육연맹에 수영장 레인을 우선 배정하고 그 이후 연맹이 자체 순위 시스템에 근거하여 각 연맹 소속팀에 레인을 재배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순위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연맹 소속팀들이 실제 비영리단체인지, 그리고 연맹에 우선 배정된 수영장 레인 사용권이 부당하게 양도된 일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레저·문화서비스부가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된다.
- 라우 옴부즈만은 ‘정부는 체육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일부 체육 연맹의 훈련과 시험을 목적으로 몇몇 연맹에 공공 수영장 레인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수영장

레인이 가치 있는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제한적인 여가·체육 시설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고 서로 다른 사용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레저·문화서비스부가 체육 연맹에 우선권을 주고 일부 수영 레인을 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준다면 해당 공공 자원이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레저·문화서비스부는 현재 우선 배정 레인을 이용하고 있는 수영팀이 부적절한 영리활동에 관여한 적은 없는지,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레저·문화서비스부가 그러한 감독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해 왔는지 그리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해왔는지에 대하여 옴부즈만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번 직접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레저·문화서비스부 공공 수영장 레인 배정 체계의 효율성
- (2) 체육연맹 우선 배정 레인의 소속팀 재배정 과정에 대한 레저·문화서비스부의 충분한 관리·감독 여부
- (3) 수영팀의 배정 레인 이용약관 준수에 대한 레저·문화서비스부의 충분한 관리·감독 여부
- (4)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아르메니아: 인권위원장 보건부의 정신병원 분야 개선 조치 환영
 <아르메니아 보건부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권리 등 정신병원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출처: ARMENIA 'Human Rights Defender welcomes steps of Minister of Healthcare in the field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OI 홈페이지>News, 8.22.2018)

- 인권위원장이 정신병원 분야 개선을 위하여 보건부가 채택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보건부는 정신병원과 관련하여 인권위원장이 발표한 임시 공공 보고서에서 명시된 위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 보건부 장관은 특히 인권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 ▶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 팜플렛 제작 승인
 - ▶ 금치산자의 정신과 치료 및 서비스 절차, 법원과의 협력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안 작성
 - ▶ 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직종의 장점 및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 ▶ 상당수의 정신병원에서 보수공사 시행 중. 침상, 집기류, 가구, 침구류, 신체구속 수단, 위생 및 기타 필요한 소모품 보충
- 인권위원장은 보고서에 언급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건부 장관이 취한 조치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인권위원장은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 인권위원장실은 2017년 이루어진 비밀 방문조사 중에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위법적 상황들을 발견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는 신체구속 방법의 사용, 기한이 지난 약물 투여, 투약 제한 및 제한 기록의 부적절한 관리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불충분한 음식 제공, 실험실 시험에 대한 동의 획득 절차 미흡 등의 위반사항도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적절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해당 분야 관련기관 사이에 기능 분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또한 인권위원장실 보고서에 나타난 정신병원 유료 서비스 제공 관련 문제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가 형사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다.

□ 뉴질랜드: 옴부즈만 완가누이 교도소 재소자의 폭력과 위협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 촉구

<뉴질랜드 옴부즈만은 교도소 내 조직폭력단이 재소자와 교도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세부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NEW ZEALAND ‘Ombudsman calls for Whanganui Prison to urgently address inmate violence and intimidation’ (IOI 홈페이지>News, 9.5.2018)

- 뉴질랜드 피터 보시에 옴부즈만은 완가누이 교도소에 재소자 사이의 폭력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2월 완가누이 교도소에 대한 비밀 전면조사 이후 발표된 옴부즈만의 보고서가 오늘 오후 의회에 제출되었다.
- 보시에 옴부즈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직원들은 서로 다른 팀 사이의 협업 수준이 다른 곳보다 높다고 말했다. 재소자 수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 ‘조사 결과 사건 담당자들이 시의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의 서비스를 재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감자 수용이 차분하면서도 계획적인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 수감 시설은 대체적으로 두 개의 동을 제외하고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고위험/저위험 재소자동 모두 환기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교도관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면 재소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보시에 옴부즈만은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 ‘교도소 내 폭력과 위협의 수준을 저감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보시에 옴부즈만은 완가누이 교도소에서 매달 상당수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완가누이 교도소의 두 개 동은 교정국 관할 북부 아래지역 모든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폭력사건 건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 옴부즈만에 따르면 폭력과 위협 사건의 수위는 심지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재소자의 71%가 사건 발생 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로 교도소 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피해를 신고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재소자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로부터의 협박이나 괴롭힘 문제 등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관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흔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한 지난 조사 이후로 재소자들 간 싸움이나 말다툼,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상 등의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옴부즈만은 또한 교도소 내 조직폭력단 관리 전략이 부재한다고 밝혔으나 교도소장은 현재 전략을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 보시에 옴부즈만은 재소자의 40% 이상이 조직폭력단 소속이거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 ‘조사의 결론은 교도소 내 조직폭력단의 광범위한 영향이 재소자와 교도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이고 집중적인 조직폭력단 관리 전략 없이는 폭력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힘과 협박을 가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다’.

□ 호주: 아동보호부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결과 발표

<남호주주 옴부즈만은 두 소녀에 대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가족부와 아동보호부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출처: AUSTRALIA ‘Ombudsman statement on investigations into the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IOI 홈페이지>News, 9.24.2018)

- 호주 남호주주(州) 옴부즈만은 아동 성범죄 행위 의혹에 대응하는 데 있어 남호주(SA)주(州) 가족부와 아동보호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오랜 자체 조사를 마쳤다.
- 옴부즈만은 지난 10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가족부, 아동보호부 및 다양한 민간 개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서신을 받게 되면서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편지를 읽어 보았을 때 제기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편지 전체의 일관된 요지는 가족부·아동보호부가 아동 특히 두 소녀를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인계 받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 가족부·아동보호부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호주주 옴부즈만은 문제의 인물이 세 명의 다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가족부·아동보호부가 받은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가족부·아동보호부는 이러한 의혹 중 어느 하나도 제때에 확인하지 않았다.
- 옴부즈만은 문제의 가정과 관련한 정기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아동보호부가 성범죄자 의혹에 대한 제보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 소녀들의 거주 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기록에서 발견했다.
- 옴부즈만은 조사를 계속하여 성범죄자 의혹 제보를 처음으로 받은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옴부즈만은 가족부·아동보호부의 이후 기록을 살펴본 이후 문제의 성범죄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두 소녀의 정확한 주거 환경에 대하여 가족부·아동보호부가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옴부즈만은 가족부·아동보호부가 이처럼 두 소녀의 정확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의혹에 대한 조사 책임을 남호주주 경찰에 전가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족부·아동보호부가 형사상 범죄 의혹에 대한 제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아동의 정확한 상황을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 가족부·아동보호부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옴부즈만은 최종 보고서에서 가족부·아동보호부의 과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 아동 보호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제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조사 미이행
 - ▶ 아동보호 관할구역 특유의 법정 권한 및 요인에 대한 고려 미흡
 - ▶ 성범죄자 의혹 관련 제보에 대하여 총체적 접근방식 채택 미흡
- 남호주주 옴부즈만은 성범죄자 의혹 제보에 대한 가족부·아동보호부의 대응 방식이 1972년 옴부즈만법 제 25(1)(b) 조항에 의거하여 합당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